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대도약 원년 완성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Q 가장 큰 생활비 부담은?

경기회복·초혁신경제 + 글로벌 위상 제고 + 민생경제·공급망 안정적 관리

1 성장률 반등

'26.1분기 **1.8%**(전기비) 성장
* OECD·IMF는 '26년 우리경제 성장전망을 **2.6%**로 상향조정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3%**대까지 전망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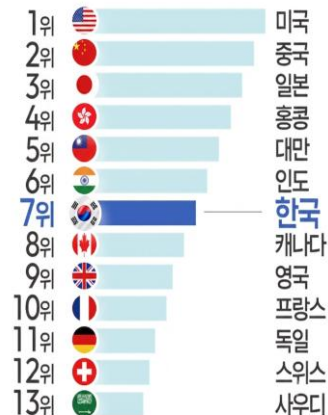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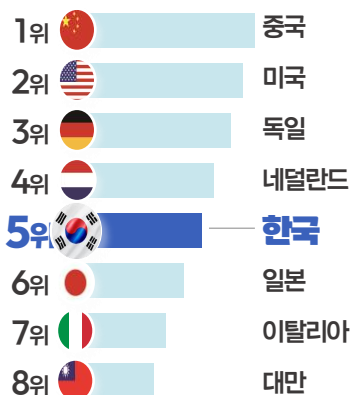


2 수출·증시 역대 최고

수출 5위, 경상수지 최대 흑자(**1,413억불**, '26.1~5월)
증시 **13 → 7위** (4.66조\$, 6.30기준)

수출액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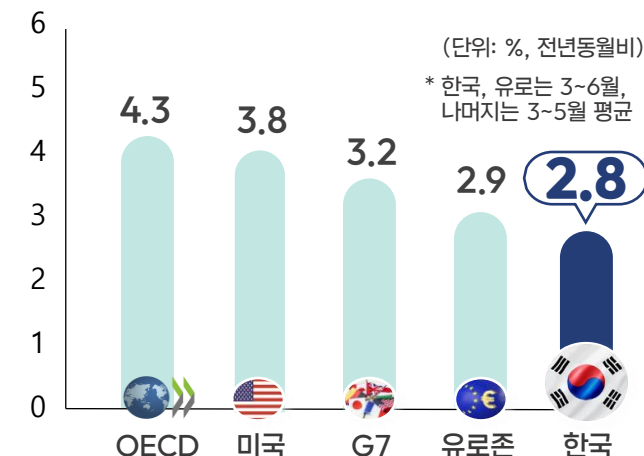
시가총액 순위



3 소비자물가 안정

안정적 물가 관리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3~6월 물가 완화: 평균 **△0.7%p**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국가경쟁력 70개국 중 **21위 도약**, 전년도 평가 대비 **6단계 상승** (IMD, '26.6월)

역대 정부 유일 **전국/비수도권 일자리 동시 확대**
(출범11개월 기준(전년비, 만명))
(전국) : 13.7 → 16.5 (비수도권) : 3.0 → 15.4

더 큰 도약을 위해 재정경제부가 앞장 서겠습니다.



경제 총괄부처
기획·조정 역할 적극 수행

세제 · 국고 · 외환 · 공공
재경부 본연의 핵심과제 완수

미래 경제 아젠다
적극 발굴·추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안정 달성

하반기 3% 이내 물가 관리



먹거리

- 역대 최대 농축수산물 전품목 할인(7~8월)

에너지·생계비

- 최고가격·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
- 전기·가스요금 하반기 동결

시장질서 확립

-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신설('26.下)

고용 개선 산업전환 대응



산업전환 선제대응

- 3대 메가프로젝트 인력양성
- 중장년 이·전직 맞춤형 직업훈련

부문별 고용여건 개선

- 제조·건설업 등 고용 부진 부문 대응방안 마련

외환시장 관리 주거 안정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 24시간 외환시장 개방(7.6일)에 따른 모니터링 및 시장 교란행위 대응 강화

주거안정 지원

- 관계장관회의 통해 주택공급 촉진
-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구축

포스트 중동 공급망 강화



국내생산·비축

-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지원

해외생산·수입다변화

- 해외생산 기반 구축 지원
- 대체수입 지원

위기대응

- 범부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26.下 시범운영)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총력

3대 메가프로젝트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
KOREA'S 3 MAJOR MEGA-PROJECTS



- 세제·국고·공공 등 전방위 지원
 - 지역 우대 세제지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공공기관 예타 절차 신속 추진(신속예타 6 → 2개월)

전략경제



- 전략경제자문단('26.4~) → 선도프로젝트 추진
- AI(5년간 22조원), 반도체·이차전지 등(5년간 50조원) 방산·원전·인프라(5년간 100조원) 등 금융지원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 국가전략기술 미래 에너지 분야 (예: SMR) 신설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 녹색산업 공공조달 확대·생산세액공제 지원

국부펀드



- KIC에 전략투자계정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26.下)
- 전략산업 지분투자 → 장기 인내자본 제공

대미투자



-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 양국에 전략적 이익이 되는 대미투자 추진
- 조선분야 민간 직접투자·선박금융 금융지원

서비스 산업



- 『서비스산업발전기초법』 제정 추진('26.下)
- 생활밀착 서비스 제도개선 지속발굴

AI역량개발 일자리·창업 주거
20만명 30만개 우선·충분 공급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



- ▶ K-뉴딜 아카데미 등
청년 AI 전문인력 20만명



- ▶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 청년 창업가 10만명



- ▶ 공공임대주택(역세권)
우선·충분 공급



- ▶ 청년형 ISA 출시 ('27년)
결혼·출산·문화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강화
저소득층 안정화 지원



- ▶ 중소기업 투자·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간 신설
(피터팬증후군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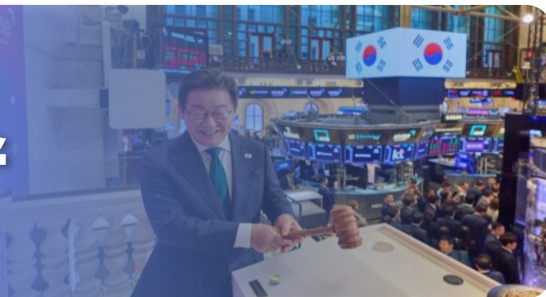


- ▶ 소상공인 유망 아이디어
사업화 패키지 지원(+400억원추경)



- ▶ 저소득 근로가구 소득요건 완화 등
EITC 기준 합리화

원화 국제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 역외 원화거래 시장 조성

- 외환시장 24시간 개방('26.7.6)
- 역외원화결제시스템 도입('27.1월)
- 자본거래 규제 완화



▶ 원화 활용성 제고

- 원화 경상거래 인센티브
- 해외차입 규제 완화
- 야간 유동성 공급체계 구축



▶ 다층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대외안전판 강화
- 외환건전성 규제 개편



▶ 해외 투자자 소통 강화

- 글로벌 투자자 협의체 신설('26.7월)
-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 정례화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 ▶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한일·APEC · G20 재무장관회의, '26.下 등)
- ▶ 정상회담 경제분야 MOU 이행 점검



- ▶ 포스트 중동 프로젝트 발굴 및
G2G 협력 강화



- ▶ K-개발금융
 - 초대형 민관합동사업 지원 위한
개발금융 법 기반 마련('26.下)
 - EDCF 기반 K-AI 패키지 개발



- ▶ 주요 국제기구 AI 기능 집적
'글로벌 AI 허브' 조성 추진

속도감 있는 조세·재정·공공 개혁

공정과세 및 경제대도약을 위한 조세개혁

조세지출 원점 재검토

- ▶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 ▶ 합리적 재설계·재정지출 전환

부동산 세제 합리화

- ▶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과세형평 제고

- ▶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면 재설계

생산적 금융

- ▶ 생산적 금융 ISA 신설

AI·블록체인 활용 국고·국유재산 혁신

AI → 국고자금 흐름의 지능화

- ▶ **국고금** 자금 배정·집행 수급관리·미스매치 해소
- ▶ **국채** 시장분석·리스크 관리·국채발행 최적화
- ▶ **국유재산** 자산발굴·사업성 검증·기획설계안 도출

블록체인 → 자산·거래 신뢰기반 구축

- ▶ **국고금**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집행 간소화로 투명성↑
- ▶ **국채** 결제·정산시간 단축 + 거래비용 절감
- ▶ **국유재산** 부동산 유동화로 신규 투자기회 창출

K-Asset → 국가자산의 가치창출

- ▶ **관리체계 혁신** 자산유형별 관리 고도화·개발전문성 강화
- ▶ **국유재산 전수조사** 정기조사·감사 강화 → 사각지대 해소
- ▶ **국민참여 이익공유** 민간 개발참여 활성화 + 국민 수익공유

전방위적 공공개혁

HW 핵심 공공기관 구조 혁신

- ▶ 발전공기업(5개), 코레일·SR, KOBACO·시청자미디어재단 통합
- ▶ 자회사·소규모 기관 정비 및 유사 중복기관 통폐합('26.3분기)

SW 공공기관 AI 활용 본격 확산 →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 ▶ 청년 AI 서포터즈(7월), 공공기관 AI 활용 경진대회(10월) 등

안전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3분기 中 공운법 개정)

- ▶ SOC 및 에너지 공기업 건설현장 등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혁신조달 혁신기술·제품의 First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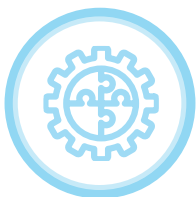
- ▶ 혁신기술 획득을 위한 한국형 OTA 신설
- ▶ 로봇 등 혁신제품 지정 간소화, 지역 혁신제품 발굴

성장엔진 발굴 및 현장 소통 강화



5극3특 성장엔진 발굴·선정

- 3축 (투자 인센티브·산업 생태계·기업 활동기반)
7대 패키지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
종합 지원·조정



혁신·투자 지원체제 구축

- 지방정부 및 지방상의 참여로
『기업혁신 지원 민관 협의체』
⇒ 『5극 3특 지원 민관협의체』로 확대 개편



지역 수출기업 현장애로 해소

-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9개 도 단위 지방정부와
『지역 수출진흥 협력협의체』 구축

비수도권 친화적 재정·세제·경영평가 재설계



공공조달 지방우대 확대

- 비수도권 기업, 인구감소지역 기업 우대체계 마련('26.9월)



기업·근로자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

- (기업) R&D·투자·고용에 지방우대 세제지원 도입
- (근로자)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우대,
비수도권 이전 기업 근로자 이전지원금 비과세
- (창업·벤처투자) 지방 중소기업 창업 및
벤처 투자 세제지원 우대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경영평가 편람에 중점 반영('26.4분기)

경제분야 9대 정상화 과제 신속 추진

공정과 원칙이
바로선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

편법과 꼼수를 차단하여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구현

Action 01 매점매석 경제적 유인 원천 차단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6.12월)

Action 02 공공기관 기간제 쪼개기계약 금지 고용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반영('26.5.29 완료)

Action 03 할당관세 제도 악용 방지 강화 『관세법』 개정('26.12월)

부당이득
차단

특혜·부당이득을 차단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구현

Action 04 국유재산 무단점유 근절 『국유재산법』 개정('26.12월)

Action 05 전관유착 방지 및 점검체계 강화 재경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운영지침』 개정('26.7월)

관행
타파

낡은 제도를 정비하여 실용적인 정부로 거듭

Action 06 관행적 조세감면 정비 『2026세제개편안』 반영('26.7월)

Action 07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6.9월)

Action 08 공공기관 공무원 처우개선 『2027년 공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 개정('26.12월)

중대재해
근절

안전관리 강화로 중대재해 없는 공공기관 구현

Action 09 공공기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6.9월)

재정부 AI 업무지원 프로그램 개발

① 세법개정 도우미

인용조문 개정 노력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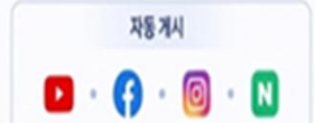
AI 세법개정 도우미

조문 유형	헌법 조문	개정된 조문	헌법 위법	조치 필요
인용조문 A	제45조 제1항	제45조 제2항	✓	-
인용조문 B	제45조	제45조	✓	-
인용조문 C	제45조 제1항	제45조 제2항	✗	개정 노력

계정 노력 사전 감지로 법령 완성도 제고

② 카드뉴스 생성기

정책 보도자료표안으로 카드뉴스 자동 생성 및 부처 SNS 게시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정책 제검도 제고

③ 공공기관 경영정보 분석

국민 모두가 전 공공기관의 정원 및 재무 등 정보를 손쉽게 비교·검정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뉴미디어 기반 양방향 소통



성과는 확실하게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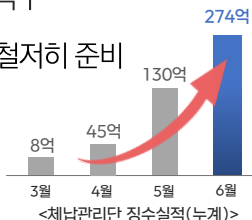
1 국민과 함께하는 체납관리 혁신

1만명의 체납관리단 133개 세무서에 배치되어 130조 체납 실태확인 업무 착수

- 페이퍼리스 업무시스템(태블릿PC) 구축, 안전·보안대책, 교육·성과관리까지 철저히 준비

3월 출범 국세 체납관리단(500명) → 274억 징수, 투입예산 대비 388%성과

- 납부약속 2.1만명, 추적조사 329명, 납부의무소멸 3,558명, 복지연계 1,150명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의 성과를 발판삼아 1만명 체납관리단도 반드시 성공시켜 '1석 5조' 정책효과 극대화

①조세정의 실현, ②재정확보, ③생산적 일자리 확충, ④체납 일제정리, ⑤복지대상자 발굴

2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국가 재정 효율 혁신

통합징수법 시행에 앞서, 각 부처와 업무협약(MOU) 체결 → 분산된 체납 정보 수집

7월~12월까지 체납관리단이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 → 체납자별 DB 구축

통합징수법 시행에 맞추어 국세 시스템과 연계된 통합징수관리시스템 개통 → 통합징수 본격시행

각 부처에서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관리·징수되던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징수, 국가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대한민국 재정혁신 선도

3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 실현

물가상승·민생침해

장바구니 물가 불안 야기
가짜뉴스 유투버 등

조사 추징 범칙

131건 3,302억 33건

주식시장 불공정

상장법인 터널링 업체
주가조작 세력 등

조사 추징 범칙

27건 2,576억 38건

부동산 탈세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등
시장 과열지역 부동산 탈세

조사 추징 범칙

398건 481억 10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추적조사강화 年 역대최대 3조 징수
징수공조 확대로 해외은닉재산 환수
전체징수실적의 90% 404억

적극적 공매 집행 전년대비 61%↑
민사소송 적극 제기 전년대비 17%↑
대리인 성공보수 한도상향 10억→30억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주식시장·부동산 탈세는 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긴 재산까지 끝까지 찾아내 징수

4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폐업 소상공인(7만명) 구직지원금 비과세 해석, 중동전쟁 피해기업(32만명) 납기연장 등 (~'26.上)

①고환율·고물가 위기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②청년의 고용·창업지원,
③지방이전기업의 안정적 정착지원 등 상생성장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실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환율·고물가 위기기업 유동성 지원 (103만명)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 (1,200만명)

청년

(고용) 체납관리단 청년 채용
(창업) 스타트업 세금드문케어

지방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창구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5 국세행정 AI 대전환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어디인지 알 필요도 없이
'AI 전자신고'가 자동신고해주는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AI 탈세적발시스템' >>>

국민 효능감이 큰 세정서비스부터 AI를 우선도입
"공공 AI 선도모델"구현

대체불가 안전한 사회, 무역강국을 위한 경제국경관리

국정과제 37

마약 반입 원천 봉쇄

767건, 1,007kg
(‘26.6월 기준)

✓ 마약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구축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출입자

(기존) 1차 저지선

수입금지 5천 5백여 제품,
수입허가 6천여 품목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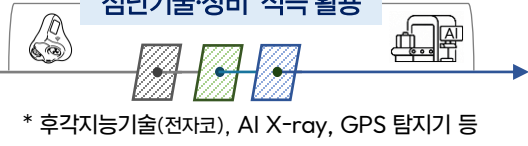


(확대) N차 저지선

마약 전담 2차 판독·특별검사

첨단기술·장비* 적극 활용

* 후각지능기술(전자코), AI X-ray, GPS 탐지기 등



국정과제 37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척결

3조 9천억 원

‘TBFC* 종합 방지단속체계’ 구축

* Trade-Based Financial Crime

✓ 정부지원 수혜·공공조달 낙찰·상장 신청정보 등 수집·분석을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수출입실적조작을 통한 부정수급·조달·자본시장 교란 의심업체 선별·단속

✓ 관계기관과 단속결과 등 정보 공유

[TBFC 주요 유형]



국정과제 37

K-제조업 보호

국산둔감 53건, 1,477억 원

K-브랜드 침해 1,465건, 1만4천 점

✓ 수입-유통-수출 전 단계에 걸친 원산지 관련 범죄 발생 차단



기울어진 운동장, 국내 제조업 고사 위기
✗ 국산 둔갑 ✗ 짝퉁 ✗ 탈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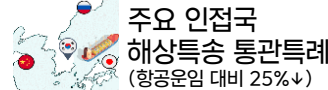
자제과제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

4,967억 불 수출

역직구 활성화

통관·운송비용 절감



세제부담 완화

부가세 자동 환급,
관세환급 대상 확대 ...

수출기업 전환

K-브랜드
품목번호 신설



수출 코칭 서비스



첨단산업 육성

전국 거점 세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

건설 (보세건설장) — 제조 (보세공장) — 수출 (FTA 활용)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

국가 정상화

※ 체납자 연 1만3천명 입국

국세·지방세 체납자 10만명, 70조원 → 반입물품 검사·압류·매각 위탁

국정과제 24

AX 대전환 → 현장에서 AI 모델을 직원이 직접 개발·활용(AX 챌린지 / 연 2회)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

혁신조달 성과창출 가속화

‘30년 혁신제품 5천개, 구매 3조원 목표

- ▶ **제품 확대** 지방정부 스카우터 & 범정부 기술실증 연계
→ 권역별 특화·전략산업 제품 집중 발굴
- ▶ **내실화** 지정절차 간소화, 사후관리 강화, 플랫폼 통합

AI 산업 활성화 및 공공조달 AX

- ▶ **AI 구매** 실적요건 폐지, 심사 가점, 패스트트랙 계약
→ 신속한 시장진입과 안정적인 판매 유도
- ▶ **조달AX** 예가 작성 등 20개 이상 업무에 AI Agent 도입
→ 조달 전 과정에 AI 적용 확산

해외실증 등 글로벌 판로 지원

- ▶ **개별국가** 혁신제품 스케일업 R&D, 해외실증 확대
- ▶ **국제기구** 민관 네트워크 구축, 입찰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출상담회 개최 등 집중 지원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조달 자율화로 지방정부 선택권 확대

‘26년 시범사업, ‘27년부터 모든 지방정부

- ▶ **시범사업** 경기·전북 전기전자제품 → 모든 제품으로 확대
- ▶ **기반 완비** 지방정부간 교차구매 근거 마련, 단가계약 가이드 제공, 전용 쇼핑몰 구축 등
- ▶ **부작용 방지** 계약규정 위반 등 자체발주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
(상반기 34,822건 점검, 1,433건 시정요구)

지방기업 살리는 비수도권 기업 우대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4월) 신속 이행

- ▶ 비수도권 기업 가점 부여, 동일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제품 우선구매, 경쟁없이 구매가능한 범위 확대
- ▶ 비수도권 공장·본사 이전 기업,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더 큰 혜택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공정하게 경쟁하는 조달시장 확립

- ▶ **불공정대응** 직권조사 실시, 조사불응 시 과태료 부과, 수요기관 부당행위 조사 도입
- ▶ **공정평가** 기업-위원간 사전접촉 신고·조사 강화, 위원별 평가이력 관리, 평가위원 공무원 의제
- ▶ **경쟁확대** 사전 규격공개 강화, AI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을 연계하여 발주기관의 ‘규격 알박기’ 차단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방지

- ▶ **실지조사** 모든 적격심사 공사 낙찰 예정자 대상 현장조사 실시 → 페이퍼컴퍼니 낙찰 배제
- ▶ **입찰보증금**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및 심사포기 이력자**공통**, 낙찰예정자 및 실지조사 적발기업**공사**, 무분별입찰 우려 품목 공급입찰자**물품** 등에 부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경제대도약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